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251-01



2016. 5. 29 / 12. 20. 일부 개정한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할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

이 매뉴얼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일선 학교에서 정착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적용 방법을 안내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작 되었습니다.

I. 총괄

I 장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주요 용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공교육 정상화법의 목적’, ‘2. 용어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학교의 책무’, ‘5. 학부모의 책무’, ‘6. 시정 및 변경명령과 이의신청’으로 절을 구분하였고, 각 절은 ‘관련 법규’, ‘해설’, ‘Q&A’로 구성하였습니다(‘Q&A’는 2, 3, 4절에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II. 학교 교육과정 / III. 방과후학교

II장과 III장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점검 관련 사항이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II장에는 ‘1.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2. 평가’, ‘3. 적용 예외’가 제시되어 있고, III장에는 ‘1. 방과후학교’ 관련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절은 ‘관련 법규’, ‘해설’, ‘Q&A’로 구성하였습니다(‘해설’에는 선행교육 판단 기준, 선행교육 사례, 학교의 유의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IV. 입학전형

IV장에는 입학전형 관련 점검 사항을 ‘1. 중·고등학교’와 ‘2. 대학’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습니다. 각 절은 ‘관련 법규’, ‘해설’, ‘Q&A’로 구성하였습니다.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매뉴얼 별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록

최근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을 제시하였습니다.

I

총괄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2
2. 용어 정의	4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4. 학교의 책무	15
5. 학부모의 책무	19
6. 시정 및 변경명령과 이의신청	20

II

학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운영	26
2. 평가	31
3. 적용 예외	35

CONTENTS

III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38
----------	----

IV

입학전형

1. 중·고등학교	44
2. 대학	49

부 록

1.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비교표	58
2.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5조 관련)	67
3. 공교육정상화법 신규법 비교	70

I

총괄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2. 용어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학교의 책무
5. 학부모의 책무
6. 시정 및 변경명령과 이의신청

0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제1조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그 근거로서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총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19조 원에 달하고 있음.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음. 또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은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입학 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 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은 특별법으로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학교의 교육활동 시기, 학년 편성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들이 있으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들(☞ 본 매뉴얼 'III장 - 적용의 배제'에 해당 사항이 제시되어 있음)을 제외하고 모두 이 법이 우선한다.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학급편성)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에서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초등학교에서 복식학급(무학년제)이 편성될 경우에는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선행교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¹⁾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II-2.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7)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2015).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10쪽

02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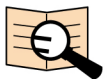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해설

제2조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사용되는 3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교육관련기관”, “선행교육”, “선행학습”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관련 기관

-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학교이다.
각 법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예시>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선행교육

-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학교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3) 선행학습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Q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3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3 학교는 시·도 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등 모두 3개의 학년군으로 이루어지며,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이 외에 선행교육 점검 관련 내용은 본 매뉴얼의 II, III장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참고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생략) ...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해임),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참고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생략) ...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참고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3조(보고·조사 등) 참고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주요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는 교육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교육감을 의미

•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과 시정을 위한 노력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위해 각 주체별 주요 조치 사항

담당	주요 조치 사항
교육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div style="border: 1px dashed orange; padding: 5px; margin: 5px 0;">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의결 사항(「공교육정상화법」 제11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div> • 국립학교 및 대학등에서 법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 • 국립학교 및 대학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기관장 징계 요구 및 기관 행정 처분 시행
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div style="border: 1px dashed orange; padding: 5px; margin: 5px 0;">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의결 사항(「공교육정상화법」 제12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div> •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에서「공교육정상화법」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와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 •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에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징계 요구 및 기관 행정 처분 시행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학교가 국가에서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교육부

-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초·중등교육법」 제23조)
-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을 작성하여 제공(「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이 선행교육 위반 및 선행학습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조정

시·도 교육청

-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가 반영된 시·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고시하여 학교가 법 위반 없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안내 및 지도
- 시·도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작성 안내하여 학교에서 공정한 학업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관리
- 학교가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학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학교가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 등을 조직·운영

-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평가 하는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교육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조사 대상 자료: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2)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과 시정을 위한 노력

-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역할

1. 선행교육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분석 시행
2.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수행
3.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다. 교육부장관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주요 역할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선행교육 방지 대책,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장관의 요청 사항 등을 심사·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장관은 통보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장관은 위원회가 재심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

•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 자격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운영

구분	주요 내용
임기	•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회의	• 정기회를 반기별 1회 소집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회의 소집 가능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
위원의 해촉·해임	• 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부적합 사유, 회피 불이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해임 가능

(4)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교육감이다.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책무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역할

-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교육감의 요청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교육감은 통보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교육감은 위원회가 재심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

• 구성

- 교육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위원 자격 : 시·도교육청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가,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원,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운영

- 위원회의 위원 임기, 회의 소집, 개의·의결·자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 수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 흐름도(예시)〉

- 선행교육 관련 각종 민원 제기 시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처리기관	업무처리
① 출제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민원발생)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유사사례 참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 → 민원인이 학교 처리 결과를 수용할 경우 : 민원처리 종결 →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 (☞ ②)
②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시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유사사례 참조) 필요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 실시한 후 해당 학교에 처리 방안 통보 → 민원인이 학교 처리 결과를 수용할 경우 : 민원처리 종결 →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조사 내용 및 검토서 등 첨부하여 상신하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에 시정·변경명령 등 조치가 수반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③ 교육감 소속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검토서 등을 내부 검토 후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 (필요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 실시)
④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상정 및 처리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개최 ※ 담당 공무원은 심사 안건 자료 등 회의 자료 준비 →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징계의결 요구 -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행·재정적 제재



Q1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별로 규칙을 제정해야 하나요?

A1 시·도교육청별로 필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Q2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A2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개최 시기와 횟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정기회는 반기당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나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Q3 시·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나요?

A3 두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겸할 수 없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근거하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야 합니다.

Q4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4 두 위원회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차이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심의 사항	국가교육과정 운영, 선행교육방지 대책,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장관의 요청 사항 등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교육감의 요청 사항 등
위원회 구성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학습이론·대학입학전형 관련 전문가, 학부모·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학습이론·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가,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학부모·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04 | 학교의 책무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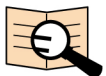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해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교과 재구성, 수업 지도 및 평가 방법 등이 연간 교과지도계획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진로진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 활동 참여만으로도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시·운영해야 한다.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선행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학교 내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여 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한다.

학교 내 교육과정 기구들의 설치 운영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치 제9호」 교육부 훈령)

- 학교장은 학기 중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 편성된 과목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행위,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등의 선행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학교장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公示하여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4)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Q1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예방 교육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A1 교원 연수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학교는 교과 및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 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으로 하여금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에 관한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법령과 지침을 숙지·준수하도록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학교알리미 등에 공시된 대로 교육과정 편성 - 교과 수업 운영 - 평가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기당 1~2회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교원 연수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예시)〉

연수 주제	연수 목적	연수 내용
1. 공교육정상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정상화의 의미와 목적	가.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이해 나. 「공교육정상화법」의 이해
2.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역량 제고	가. 국가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지침,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와 활용 나.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서의 활용 다.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와 교과 간 통합적 요소의 이해와 활용 라. 성취평가제와 입시제도의 이해와 적용
3. 선행교육 판단 기준	선행교육 판단 기준의 이해와 활용	가. 선행교육 판단 기준의 이해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과정에서 선행교육 판단 기준의 활용
4. 정보 공시	정보 공시제와 관련 교육 정책의 이해와 적용	가. 정보 공시제의 의미와 관련 법규 나. 정보 공시의 범위와 적용 방법

Q2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회의, 간담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이용, 기타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등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 정보 공유, 학부모 의견 수렴(청취), 학습상담 기회 제공, 진로·진학 관련 설명회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만 충실해도 진로진학 등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상담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 운영 및 평가 계획을 비롯한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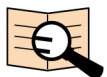
05 학부모의 책무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 법 시행의 성공 여부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얼마나 믿고 따르며 지지·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학교가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정부의 공교육정상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일,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학부모 및 학생 대상 홍보 프로그램 예시〉

홍보 주제	홍보 내용
1. 공교육정상화의 의미와 목적	가. 공교육정상화 정책과 「공교육정상화법」의 이해 나. 학교 교육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역할과 참여
2. 학교 교육 정책과 학교교육과정의 이해	가. 입시 정책과 평가 제도의 이해 나. 우리 학교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일정 안내
3. 학교 교육 활동에의 효과적인 참여 방법	가. 자녀의 바람직한 교우 관계 형성 방안 나.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의 안내

06

시정 및 변경명령과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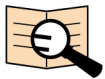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육과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에 관련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징계 및 행정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 각항의 ‘지정된 기간’이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관련기관에 명령한 시정이나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1) 시정명령과 변경명령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2)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징계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징계의 종류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4556호)」에 의한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4556호)」에 의한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세부 내용은 본 매뉴얼의 부록 2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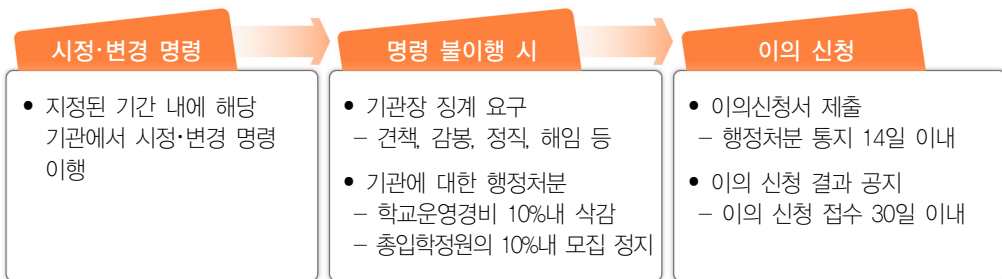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이의신청 절차를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II

학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평가
3. 적용 예외

01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략)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3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해설

-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²⁾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본 매뉴얼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줄여서 ‘선행교육’으로 제시함.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 학 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학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편성 단계

- 초·중·고등학교는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도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내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편성한다.
-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한다.

- 운영 단계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에 비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즉, 학교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한다.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진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단, 학교는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한다.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Q1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1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2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 내용을 이번 학기에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2 네, 이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것은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3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 I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진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Q4 [고등학교] 한 학기 내에서 위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A4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어긋나지 않게 진도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에 미적분 I 과 미적분 II를 동시 개설할 수 있지만, 미적분 I 을 모두 배우고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미적분 II를 배우고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진도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Q5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5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나누어 지도하는 방식 자체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 간에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하게 될 학습 순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편성된 과목과는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는 기본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계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Ⅱ 과목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적분Ⅰ 과목의 내용이나 과학 과목의 내용 일부를 다시 한 번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적분Ⅰ 과목 시간에 미적분Ⅰ 과목의 진도를 마치고 이어서 미적분Ⅱ 과목의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위계가 없는 교과목의 경우>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시 내에서 세계사의 내용을 일부 연관짓거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의 교육 내용을 의도적으로 세계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거나 한국사를 세계사 중심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AP, UP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P, U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AP, UP(대학과목 선이수제, Advanced Placement, University-Level Program)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미리 들으면 대학 입학 뒤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고등학교]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거점학교에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학생은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졸업 이전에 개설되지 않을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을 거점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위계가 있는 과목을 거점 학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개설의 위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초6 ~ 중1, 중3 ~ 고1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 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 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02 | 평가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3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해설

-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학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한다. 학교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한다.
 -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 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한다.



Q1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1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교과목을 두 학기 이상 편성했을 때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 이후의 내용을 두 번째 학기의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충실한 교과목 이수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진도표와 평가 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능 등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학교 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진도가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 비하여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에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 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 학기 안에서 교육 내용의 위계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Q3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3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4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의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4

네, 그렇습니다.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입학 단계 이전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의 1학년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Q5

교과 관련 교내 경시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1학기 이상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5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6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6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7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경시대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7

네, 그렇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교내 교과 관련 경시대회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2학년에 편성된 과목의 내용을 출제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1학년 학생에게는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8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각종 대회(영어연극 대회, 에세이쓰기 대회 등) 및 각종 교내 대회(우리 역사 바로 알기, 골든벨 교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8

네, 그렇습니다. 교외 대회 참여를 위해 학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학교)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 학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가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03 | 적용 예외



해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된다. 그런데 고유한 교육목적과 관련 법령에 의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제한 조치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 교육원’을 말한다.

-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현재 ‘과학영재학교’ 6개교, ‘과학예술영재학교’ 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 ‘영재학급’이란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하며, 해당 학교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과 지역의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으로서, 크게 시·도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나뉜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각급학교의 장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경시·경연 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 근거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개정>」

●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III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0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9.2.28까지 유효, 2016.5.29 제14149호 부칙 제2조]]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해설

- 방과후학교 편성·운영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교육과정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 방과후학교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에는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휴업일³⁾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에는 다음과 같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을 지정하고 있다.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
 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5.]

3) 학교 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는 다음과 같이 휴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

-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Q1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1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

※ 「2017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 참조

Q2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어 있지 않은 교과에 대한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의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되는 선택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단, 앞의 해설 부분에서 제시한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A3 최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과학 등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앞의 해설 부분에서 제시한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Q4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A4 2016년 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 하되,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만을 한시 허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은 2018년 2월까지,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은 2019년 2월까지 한시운영 후 성과 등을 분석하여 계속 운영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자격증반 혹은 인증 시험 강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강좌와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자격증을 학교 내의 평가나 선발 등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2017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의 유의사항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 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무과목 이수상황은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란에 입력(훈령 제10제4항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민간기관(업체) 위탁 또는 개인 외부강사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학교는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어떤 관리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위탁계약 시 방과후학교 관련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와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충분히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는가요?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은 언제 하나요?



2016년 12월 교육부에서 법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하였으며, 해당 학교에 지정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부에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IV

입학전형

1. 중·고등학교
2. 대학

01

중·고등학교

-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공교육정상화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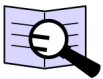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듬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범위

① 범위와 수준

-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이라 함은 중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대상 학교

-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국제중학교,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2009.3.27.이전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학생 전원을 선발하는 일부 자율학교(충남 한일고, 공주대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등)가 해당된다.

(2) 학교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입학전형에 실시함에 있어 각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자료 반영이나 입학전형에 명시된 해당 교과목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각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

- 국제중 - 국제 분야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정된 특성화중학교
- 외국어고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영어 교과 반영)
- 국제고 -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영어 교과 반영)
- 과학고 -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수학·과학 교과 반영)
- 자사고 -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반영 교과와 비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자율 결정)
- ※ 국제중, 서울형 자사고는 교과성적 미반영

(3) 입학전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

- 입학전형에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교외 활동(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벗어나는 활동도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가능 활동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 활동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을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

(4)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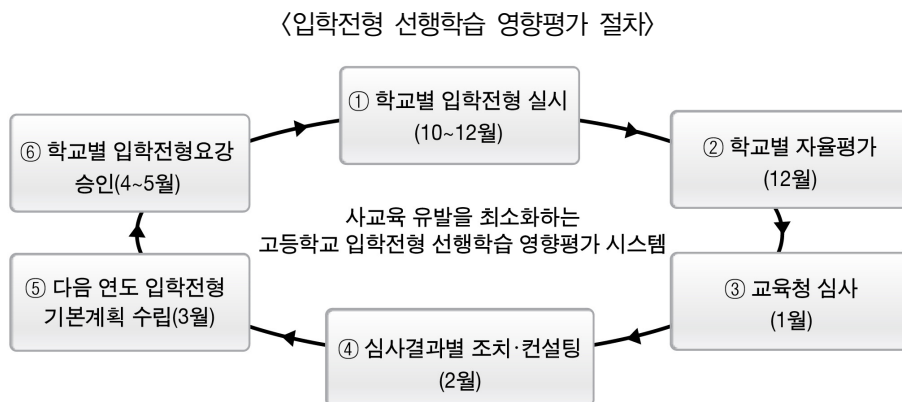
-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를 유발하는지 등을 포함한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정책 수요자(학부모 등), 중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대학 입학사정관 또는 고등학교 입학담당관 및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 교육청 담당자(고입, 학원담당) 등으로 구성한다.

②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학교별 자율평가 실시 및 보고
- 학교별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청 심사
- 심사결과별 포상, 컨설팅 및 행·재정적 처분
- 다음 연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 학교별 입학전형요강 승인



③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학교와 개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년 단위 운영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 학교의 지정 취소 사유로 활용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Q1 입학전형 시 「공교육정상화법」의 규제사항보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배제 사항이 더 많은데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해야 하나요?

A1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배제 사항 모두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 소개서 배제 사항('17학년도 기준)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Q2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2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 자료로 제출 시 해당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 전형 자료 제출 전 해당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을 통해 삭제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변경 전에 입력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 :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배제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Q3 교외 수상실적이나 인증시험 점수를 입학전형에 반영하나요?

A3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시 입학전형 자료에 선행학습을 통해 경기 및 대회 입상 성적, 각종 인증시험 점수 등을 제출하거나 우회적·간접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모두 영점 처리됩니다.

영점 처리 사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 하였고,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02 대학



법령

- 대학등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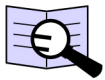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는 대학등이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1) 대학별고사의 출제 범위

- 대학등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적성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학입학전형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자율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등에서 매년 해당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고사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모든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이하 ‘자체평가보고서’)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대학등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학별고사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평가 활동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기관

-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대상이 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적용 배제 대상

- 대학별고사란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적성고사 등이 그 대상이나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대학등의 장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자체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④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등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 제출한 다음 연도 입학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18년 3월)를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18년 4월) 시 반영하거나, 기 제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17년 7월)을 변경하여 반영할 수 있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 계획의 공개

- 「공교육정상화법」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대학등이 자율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대학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억제를 위한 공시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미진할 경우, 교육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시 수요자가 검색 및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도록 한다(〈예〉 입학처/공지사항 게재, 대입정보포털(어디가) 게재)

Q&A

Q1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모든 대학이 실시해야 하나요?

A1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Q2 대학별고사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A2 예, 모든 대학별고사는 교과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법령상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 해야 합니다.

다만,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적용의 배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Q3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A3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문항 분석 결과 요약, 대학등의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은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에 대학등의 판단에 따라 추가 사항 작성도 가능합니다.

Q4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A4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해당 대학등의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면 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고사가 종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Q5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나요?

A5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규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규칙에 상세한 내용을 모두 규정하지 않고 근거 조항만을 규정한 후 상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

제00조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적성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Q6 학교규칙 등으로 규정해야 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6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되, 그 밖에 대학등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Q7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나요?

A7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2에 따라 대학등의 장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Q8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8 교과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등의 경우에는 논술, 면접·구술고사와 달리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인성이나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면접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면접활용 문항을 예시로 제시하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더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논술 등과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① 해당 면접이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인성이나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면접이라는 점을 명시



예·체능 실기고사의 경우에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예·체능 실기 고사가 체육·예술 교과(군)의 실기인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 16조(적용의 배제)에 해당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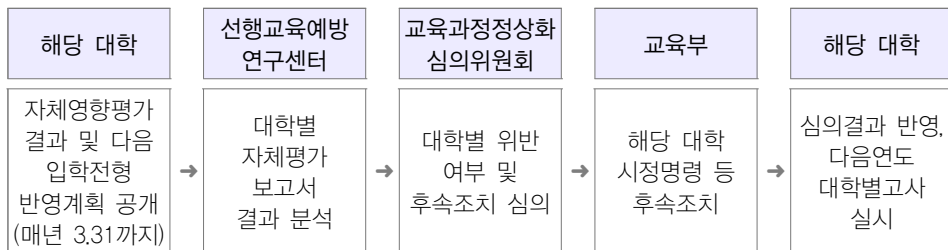


대학별고사에 대한 교육과정 위반 여부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등에서 작성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에서 분석하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최종 심사·의결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대학등의 장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징계 의결 요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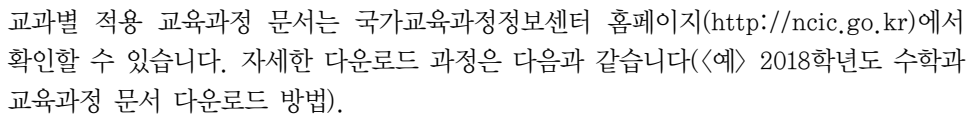



대학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등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기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전체 메뉴

우리나라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 실시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세계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 실시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 교육과정
지역별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우수학교 교육과정
우수 학교별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국가교육과정 정보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② **교육과정자료실**

교육과정 자료실
교육과정 원로 및 연구자, 법안, 정책자료 등 제공

Q&A
주요의문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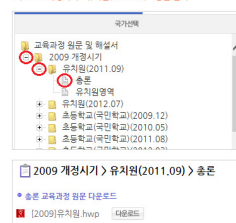
NCIC 소개
NCIC는 국가의 교육과정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③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 2009 개정시기 - 유치원(2011.09) - 송본 클릭

- 교육과정 읽은 및 해설서
- 2015 개정시기
 - 2009 개정시기
 - 2007 개정시기
 - 7차 시기
 - 6차 시기
 - 5차 시기
 - 4차 시기
 - 3차 시기
 - 2차 시기
 - 1차 시기
 - 1차 이전



[수학]

- 교육과정 원본 및 해설서
 - 2015 개정시기
 - 2009 개정시기
 - 2007 개정시기
 - 7차 시기
 - 6차 시기
 - 5차 시기
 - 4차 시기
 - 3차 시기
 - 2차 시기
 - 1차 시기
 - 1차 이전



- | |
|---------------------|
| 2009 개정시기 |
| 유치원(2011.09) |
| 유치원(2012.07) |
| 유치원(2015.02) |
| 초등학교(국민학교)(2011.09) |
| 초등학교(국민학교)(2012.07) |
| 초등학교(국민학교)(2015.02) |
| 초등학교(국민학교)(2011.09) |
| 초등학교(국민학교)(2012.07) |
| 초등학교(국민학교)(2015.02) |
| 중학교(2009.12) |
| 중학교(2010.05) |
| 중학교(2011.08) |
| 중학교(2012.03) |
| 중학교(2012.07) |
| 중학교(2012.12) |
| 중학교(2013.12) |
| 고등학교(2009.12) |
| 고등학교(2010.05) |
| 고등학교(2011.08) |



- 국가선택
- 국어와
 - 한문과
 - 미술과
 - 사회과
 - 수학과**
 - 음악과
 - 체육과
 - 전문교과
 - 심리(기술, 가정)
 - 도덕과
 - 창의적 체험활동
 - 영어과
 - 제2외국어과
 - 예술교과(2012.03)
 - 예수교과(2012.03)
 - 고등학교(2012.07)
 - 고등학교(2012.12)
 - 고등학교(2013.12)

2009 개정시기 > 고등학교(2011.08) > 수학과

-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 다운로드](#)
[\[2009 개정_2011\]수학과.pdf](#) [다운로드](#)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최종수정\).pdf](#) [다운로드](#)
[\[별책8\]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최종수정\).hwp](#) [다운로드](#)

부 록

1.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비교표
2.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5조 관련)
3. 공교육정상화법 친구법 비교

부록

1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비교표

「공교육정상화법」

2014. 03. 11. 제정

2014. 09. 14. 시행

2016. 05. 29. 일부개정

2016. 05. 29. 시행

2016. 12. 20. 일부 개정

2016. 12. 20. 시행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2014. 09. 11. 제정

2014. 09. 11. 시행

2016. 09. 05. 일부개정

2016. 09. 05. 시행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p> <p>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p> <p>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p> <p>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p>	<p>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 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p>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p> <p>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p> <p>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p> <p>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p>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p> <p>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p> <p>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p>	<p>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 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의2(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p>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 (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본조신설 2016.12.20.]</p> <p>[시행일 : 2016.12.20.]</p> <p>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고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p>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u></p> <p>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u></p> <p>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p> <p>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p>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p>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p>	<p>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p> <p>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p> <p>[법률 제14149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p> <p>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u>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u></p> <p>[신설 2016.5.29.]</p>	<p>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p>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듬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p> <p>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u>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u> [개정 2016.5.29.]</p> <p>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p>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6.11.30.]</p>	
<p>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p>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나. 국립대학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 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p>③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그 밖에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p>
<p>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고·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의2를 위반</p>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p>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p>
<p>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 개정된 내용은 밑줄로 표기함

부록

2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해당 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만, 학교운영 경비 삭감 및 입학정원 모집정지는 각각 최대 1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 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라. 모집정지 조치를 하는 학년도는 행정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가 아닌 그 다음 학년도에 반영한다. 다만, 입학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다음 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
- 마.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모집정지 조치가 있는 경우 한 학년도에 반영되는 모집정지는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 바.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가 아닌 그 다음 연도 학교운영경비에 반영하되, 같은 연도에서 2회 이상의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의 행정처분은 그 직전 행정처분으로 삭감된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 사.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학교운영경비 삭감 처분이 있는 경우 총 삭감된 경비는 최초 학교 운영경비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경우	
1)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르지 않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나.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3조를 위반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해당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3)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4)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을 실시하거나 기록 등을 반영한 경우	
1)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의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에 해당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지 않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에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영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라.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제 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마. 법 제10조의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대학등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대학등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3)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비고〉

“학교운영경비”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본운영비
2.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부록

3

공교육정상화법 신구법 비교

1. 「공교육정상화법」 신구대조표

2014. 9. 14. 시행	2016. 5. 29./2016. 12. 20. 일부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시·도교육과정”이라 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u>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의2(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2014. 9. 14. 시행	2016. 5. 29./2016. 12. 20. 일부개정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p> <p>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p> <p>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 (교원의 책무) <u>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 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본조신설 및 시행일 2016.12.20.]</p>
<p>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p>	<p>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p>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p> <p>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p> <p>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p>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p> <p>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2014. 9. 14. 시행	2016. 5. 29./2016. 12. 20. 일부개정
<p>은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p>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p>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설 2016.5.29.]</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p> <p>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p> <p>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p> <p>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p>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p>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p> <p>[법률 제14149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p>
<p>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p> <p>2. 각종 인증시험 성적</p> <p>3. 각종 자격증</p> <p>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p> <p>2. 각종 인증시험 성적</p> <p>3. 각종 자격증</p> <p>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p>

2014. 9. 14. 시행	2016. 5. 29./2016. 12. 20. 일부개정
<p>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p> <p>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p> <p>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p> <p>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p> <p>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6.11.30.]</p>
<p>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p> <p>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p>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p> <p>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p>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2014. 9. 14. 시행	2016. 5. 29./2016. 12. 20. 일부개정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p> <p>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p>③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그 밖에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p> <p>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p>③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그 밖에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014. 9. 14. 시행	2016. 5. 29./2016. 12. 20. 일부개정
<p>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p> <p>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p> <p>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p> <p>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p> <p>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p> <p>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지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p> <p>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지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4. 9. 14. 시행	2016. 5. 29./2016. 12. 20. 일부개정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부 칙[2014.3.11 제123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6.12.20 제143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신규대조표

2014. 3. 11. 제정	2016. 9. 5. 일부개정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p> <p>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p>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p> <p>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p>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 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2014. 3. 11. 제정	2016. 9. 5. 일부개정
<p>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p>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p>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듬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p>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듬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p>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p>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2014. 3. 11. 제정	2016. 9. 5. 일부개정
<p>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p>	<p>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7조(위원장의 직무)</p> <p>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위원장의 직무)</p> <p>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p> <p>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p> <p>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2014. 3. 11. 제정	2016. 9. 5. 일부개정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p> <p>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p> <p>나. 국립대학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p> <p>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p> <p>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p> <p>나. 국립대학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p> <p>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0조(위원의 해촉·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2014. 3. 11. 제정	2016. 9. 5. 일부개정
<p>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p>	<p>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p>
<p>제13조(보고·조사 등)</p> <p>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 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3조(보고·조사 등)</p> <p>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 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p>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p>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2014. 3. 11. 제정	2016. 9. 5. 일부개정
<p>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p> <p>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p> <p>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p>	<p>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p> <p>[대통령령 제25591호(2014.9.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부칙 [대통령령 제27477호, 2016.9.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검토진

권 진(교육부)

조영민(교육부)

장미경(교육부)

양정순(서울특별시교육청)

전영대(인천광역시 교육청)

원영웅(대전광역시 교육청)

곽도영(울산광역시 교육청)

김덕년(경기도 교육청)

정은영(충청북도 교육청)

이정숙(경상남도 교육청)

신종숙(전라남도 교육청)

이영훈(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종재(광주동부교육지원청)

안정희(이화여자대학교)

김근식(홍익대학교)

박희장(한국항공대학교)

안태연(한국체육대학교)

송영준(서울 도봉고등학교)

김종선(서울 양재고등학교)

최창준(전주 한일고등학교)

배 숙(경기 창덕중학교)

최규홍(대구 해안초등학교)

권영애(면일초등학교)

황혜경(교육부)

장기현(교육부)

방재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오미영(인천광역시 교육청)

김영대(세종특별자치교육청)

김성곤(부산광역시 교육청)

우치열(광주광역시 교육청)

한태희(충청남도 교육청)

최정현(강원도 교육청)

이문경(경상북도 교육청)

이한윤(전라북도 교육청)

오수정(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김보미(서강대학교)

이미경(서울여자대학교)

김정훈(가톨릭대학교)

임규홍(공주대학교)

최인영(서울 경희고등학교)

채정희(도원고등학교)

박형석(중산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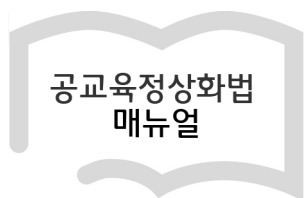
이은상(서울 창덕여자중학교)

조수진(서울 광남중학교)

홍서영(청구초등학교)

조호제(서울 송파초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실



발 행 일 2017년 3월

발 행 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우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대표번호 02-3704-3704

홈페이지 www.kice.re.kr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